

김민환의 세상읽기



민주당에 내일이 있을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11월 초에 가까스로 22%까지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앞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12월 들어 다시 20% 밑으로 떨어졌다. 20% 언덕이 마치 강고한 마지막처럼 민주당의 지지도 반등을 막고 있다.

여당 소속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 변명의 소지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박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해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친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 추이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 안철수 의원 중심의 신당은 아직 실제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창당조차 하지 않은 상태니까 가능한 정당에 불과하다. 안 의원의 언행은 예나 지금이나 모호하기 짝이 없다. 새 정치를 표방하지만 무엇이 새 정치인지 떠부려진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거울급 인사나 참신한 신진

인사를 영입한 것도 아니다. 도무지 대중적 인기를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인기 하락의 반대급부는 안철수 신당이 고스란히 받아챙기고 있다.

여론 전문가들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그 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2%로, 새누리당 지지도(35%)에 균접했다.

그에 비해 민주당 지지도는 고작 10%였다. 민주당이 제 힘으로 점수를 따지도 못하고, 정부·여당 실정의 반대급부도 쟁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브레이인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민주당이 정책적 능력이 없이 오직 반대만으로 차별성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짓고 보면 최 교수나 김 교수의 지적은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 듯. 민주당 문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라는 얘기다.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은 어느 언론 인터

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 강경해지고, 민생과 더 멀어진 것 같다”며 “대여투쟁만 강조하다 보니 자기혁신을 할 시간도, 우리 정책을 만들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종북과 완전히 선을 끊는 전략적 선택, 분열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당 혼란, 대안 마련하는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말에 민주당의 혼란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민 의원이 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半信半疑)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민주당의 실책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지지도 상승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르는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은 집권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뚱뚱지같이 정체성을 핵심 공천기준으로 내세우며 행정능력이나 경륜이 있는 테크노크라트 출신을 거의 다 떨어트리고, 그 대신에 운동권 주변부를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대거 발탁했다.

그렇게 하여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실수라도 해서 민주당이 반대급부를 행할 법 하면 어디선가 뛰어나와서 민주당 점수를 깎아 먹는 국회의원은 거개가 지난 총선에서 그 정체성 덕분에 벼락출세를 한 이들이다.

언론의 가십거리나 만들고, 국회에서 고함이나 지르고, 막말로 국민의 실소나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들이 판을 치는 정당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의 지지도 담보상태는 공천 실패로 인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병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북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친노·비노의 분열도 극복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실용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확고한 리더십을 통해 돌출행동을 막아야 하고, 실용적인 인을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그런 초보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민주당에 내일이 있는가? 민주당이 그 답을 말할 차례다. <고려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



종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국정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서양에서는 12세기 영국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동양에서는 맹자의 역성혁명에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정의 기본은 국민들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전에는 왕정이 대부분이었고, 로마도 공화정을 했다지만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귀족 공화정’이

지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유 속에서 평등하게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과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소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국민들의 생각은 들으려하지 않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잘 살도록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국제 경쟁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위 정쟁이라는 당리당략에 밟이 묶여 있다고 보도 매체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사를 통한 선거를 하였다고 한다. 여당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당은 국민

을 책략과 날조로 기만하는 즉, 국민을 전혀 인종에 두지 않는 정당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야당은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을 사인하고, 현 대통령의 당선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당선 죽하 전에 물었으나, 대통령 선거 당선 확인 전에는 물었으니,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침해하고 바른 의사 표시를 못하게 했다면

야당은 대통령 당선 확인과 축하를 하지 말고, 대선 불복을 그 당시에 했어야 한다.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절차가 끝난 뒤에 다른 근본 원인이 자신의 당리당락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인가.

이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 모두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데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서 여론이 중요한데 그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색에 따라서 “우리가 남아?”하면서 선거를 한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사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노남과 영남으로 양분되는 극한적 지역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은 호남, 한나라당은 영남이 정치적 근거지다. 민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다.

지역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당선된다. 지역구민의 의사나 뜻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구민의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공천에 신경을 쓰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공천이라는 웃지못할 현실의 사태를 단지 정당의 잘못이 라고만 해야 할까.

선거에서 여론이 중요한데 그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색에 따라서 “우리가 남아?”하면서 선거를 한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것은 아닌가?

기고

영화 ‘변호인’이 말하는 ‘상식’과 ‘진정성’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가슴이 떠먹해지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고 왔다.

영화 ‘변호인’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돼지국밥집 아주머니와 그 아들로 상징되는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3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2013년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얹을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은 현재 진행형으로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좌우파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좌우간 무엇이 상식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조차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영화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라는 대중적 형식의 매개체를 통해 송강호, 김영애, 곽도원 등 연기과 배우들이 풀어내는 상식과 진정성에 대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영화 ‘변호인’을 노무현에 대한 영화라는데 이유만으로 영화내용을 보지도 아니하고 개봉하기 전부터 평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영화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편견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여전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성이 아쉽다. 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88년 이후의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호불호와 찬반양론이 침투하게 갈릴 수 있을 텐데, 최소한 1981년 부림사건 이후 1987년까지의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의 삶은 좌우파로 나뉘어 외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화는 되돌아보게 한다. 이웃의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과 냉소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부조리나 불합리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이는 곧 입장에 바뀌어 부조리와 불합리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영화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하여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영화가 주인공을 인격의 완성체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흡집성으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

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세속적인 이익을 얻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가 힘들고 내면의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다반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판·검사, 변호사로 상징되는 법조인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적 시선으로 그려면서,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선택의 순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의 설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 인생역전의 기회를 잡고 난 이후, 아주머니의 절박하고 인간적인 부탁과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세속적인 기회의 포기 앞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이질감보다는 자신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다는 동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 ‘변호인’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극적 완성도가 높은 상업영화로 성공하여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상식이 무엇인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미덕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주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684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무등산 보호 위해 사유지 매입 서둘러야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무등산의 사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사유지가 많다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 등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 보존 및 편의 시설 설치 등 국립공원 관리가 어려워 진다는 점에서 사유지 확보는 시급한 계획이다.

하지만, 무등산 국유지화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없다면 사유지 매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지역과 편의시설 등이 방치돼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 통합, 무등산 정상·공군부대 이전 등을 통해 국유지 비율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의 사유지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8%로,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34.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제도 도입 초기 지정된 지리산(23.5%), 설악산(14.2%), 한라산(3%)과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데다 면적이 비슷한 북한산(35.6%), 계룡산(50.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인 사유지 비율은 55%(41,496㎢)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을 통합·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예산은 2017년까지 5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